

세계시장의 논리와 우리 학문의 주체성

강 순 원

한신대 기독교교육과 교수,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1. 들어가는 글

최 근 UR 파동을 둘러싸고 우리 학계는 마치 신판 강화도조약에 대응하는 양상으로 갈등하고 있다. 신판 동도서기론으로 비유될 수 있는 국제화론주의자와, 개방하면 서구 제국주의적 세력에 경제적 문화적으로 종속될 것이기 때문에 개방해서는 안 된다는 신판 쇠국주의자로 대별된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대학시장의 개방이 농수산물의 개방과 같은 범주에서 재론되는 상황에 대해 해방 50년, 즉 주체적 우리 학문 건설을 위해 주어졌던 50년 동안의 결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가에 자괴심을 느낀다.

그동안 UR 논의가 진행되던 지난 7년 동안 서비스부문의 개방에 대응하는 우리측의 한 입장은 권위주의적 정부의 시혜 속에 학생을 무제한적으로 공급받던 비경쟁적 교육시장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이른바 교육시장이 일반시장의 경쟁적 논리에 좌우되는 것에 대해 근엄한 교육학자로서 학원은 시장이 아니므로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전부터 중국에 사대적이었고 일제 식민지하에서는 완전 종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의 대학을 자주적으로 육성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에 설사 개방된다 하더라도 개방 시기를 가능한 한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런 대학의 위기상황에서 그동안 근본적으로 제기하고 싶었던 문제를 중심으로 자문자답해 보고자 한다.

문제 1. 그동안 우리 대학시장은 이미 해외 선진국에 개방되어 있지 않았는가?

김숙희 교육부장관은 며칠전 모 대학 대담에서 해외 유학생들의 자격시험인 어학시험을 폐지하겠

다고 말한 바 있다. 이미 조건이 가능한 일부 층에서는 대학원 수준의 유학은 물론이고 대학 수준 및 그 이전의 중등교육의 수준에서 해외유학을 선호하고 있다. 이들 중 자격이 미달되는 부유층 자제들이 일으키는 국제적 망신은 차치하더라도 그것의 여파로서의 유학의 거품현상은 우리 교육을 뒤엎고 있다. 이런 까닭에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해외유학시 어학시험의 폐지가 미자격자들의 해외유학의 붐을 자극해서 더욱 가속화될 것이므로 이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경향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구조의 비탄력성이 낳은 교육문제로는 현실적으로 공부 잘하는 소수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교육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말을 잃어 버리든가 아니면 공격적인 문제가 되는가 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돈으로써 그러한 구조로부터의 탈피가 가능한 아이들의 해외도피가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선 공부 잘하는 아이는 유학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낳은 구조에 대한 반성보다 이것을 소위 한국 교육상황에 부적응하는 부유층의 도피성 유학으로만 문제를 보고 그 부모들을 마치 한심하다는 듯이 비난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피성 유학이 이들에게만 한정되는가?

UR에 따른 대학시장의 개방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자 많은 대학관계자들이 세계 대학의 일반적 수준에 비해 우리 대학의 열등한 국제경쟁력을 걱정하면서 시기부적절성만을 논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수의 60% 이상이 해외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자들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지적으로 자극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일종의 도피성 유학으로 나간 셈이다. 현재 약 35%의 고교 졸업자들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등교육의 여건은 똑같다. 해방 50년을 맞이하는 오늘날까지 고등교육 담당 인력의 자생적인

재생산구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부실화로 말미암아 도피성 유학을 방조하면서 이미 상당부분을 선진시장에 내놓고 있는 것이다.

문제 2. 지금에 와서 누가 국제 경쟁력을 말하는가?

사실 노태우 정권때에만 해도 UR에 대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방화로 나타낼 수는 없었다. 당시 민족운동권의 눈치도 있고, 늦었지만 자주적인 우리 것의 추구라는 흐름도 존재했었기 때문에 미국을 위시한 서방 강대국들의 주장에 좌우되는 UR은 반민족적인 것으로 비쳤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김영삼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UR 반대를 걸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변한 것은 없지만 정치적 세력화의 판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UR의 정치적 의미도 변했고 그에 따라 민족운동권의 눈치를 볼 필요성이 없어진 중심세력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UR을 기정사실화 하였다. 그 이후 우리의 모든 사회적 모토가 국제경쟁력 강화, 즉 개방시대, 지구촌 시대의 실력제고로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약육강식의 시대를 예고하는 UR은 자민족의 것이라 해서 보호하는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보호주의를 배격하며 국제정의의 미명하에 지구를 공동으로 보호하고 살린다는 그런 라운드 및 노동자 인권의 견지에서 실시하겠다는 블루라운드로 제3세계를 압박하고 있다. 외면적으로만 보면 모든 장벽을 없애고 공개경쟁을 하자라는 것이 왜 나쁘겠는가? 또 그린라운드, 블루라운드는 일류가 공동으로 도달해야 하는 최대공약수적 목표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게임에는 최소한의 규정이 있다. 세계적으로 그것은 자국의 역사와 자주적 결

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원칙이다. 그런 맥락에서 UR 과정에서 보여준, 특히 미국측의 태도는 제3세계의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었고, 그것은 향후 세계사의 주도권을 미국이 잡을 때 도래할 세계적 갈등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대 독재정권하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미국측의 입장에 손들어 주는 행태를 넘어서질 못했다.

대학은 보편적 학문의 세계를 탐구하고 그 결과를 교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류의 공동선에 기여하는 학문공동체이므로 특히 국경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개방적인 자세로 모든 사회적 차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다. 사실 UR이 '대학시장 개방'에 갖는 여파는 우리 대학이 학문적 주체성만 제대로 겸비하고 있다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동안 우리 대학이 식민지하에서, 이후 독재정권의 비호하에서 제대로 학문적 주체성을 갖고 대학발전에 노력하지 못한 데서 대학이 낙후되었고 그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낮은 우리 대학보다 질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선진 외국 대학을 선호하리라는 막연한 우려로 인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력있는 대학에 대해 지원하라는 요구를 그동안 대학의 부실화를 방관하고 있던 사람들, 혹은 그동안 특혜 속에서도 대학을 질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는 돈이 없고, 실력이 없어 들어가지도 못할 가난한 국민들의 세금과 능력있는 졸업생들의 제정 후원 및 대기업들의 지원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돈걱정 안하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왜 국제경쟁력을 못 갖추고 있는가? 또 정부의 대학정원 할당정책으로 많은 부실사학들을 오늘날까지 온존시켜 주면서도 제대로 질 관리를 하지 않은 교육부가 전문가들을 앞세워 개방의 불가피성과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 시장

가치의 기준인 평가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이미 불공정한 게임은 아닌가?

UR이라는 세계시장의 논리를 재빨리 수용하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그동안 온갖 특혜로 인해서 자기의 경쟁력은 이미 키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앞으로 선별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비공개경쟁적 사고를 하는 세력들이다. UR이 무역 개방을 위한 불공정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원칙이라면, 적어도 대학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혹은 기업의 불공정 장벽이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 3. UR은 1876년 강화도조약에 따른 국권상실의 위기처럼 왜 말하는가?

조선 말기 우리나라는 외세의 개방압력에 직면해서 동도서기(東道西器)나 아니면 존왕양이(尊王洋夷)냐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결론은 동도서기론이 계국주의적 이면을 꿰뚫지 못한 반민족적인 근대화론으로, 존왕양이론은 민족자존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반봉건적 수구사상으로 결말이 나면서 모두 부적합했던 사상으로 격하되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외세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UR에 직면해서 일부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대학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아직 자립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문적 종속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방을 보류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그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간단히 우리나라의 대학사를 정리해 보겠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제도는 식민지적 조건 속에서 일제와 친화력을 유지한 독일의 고등교육제도를 이식한 것으로 출발하였다. 여기서 독일식 대학공

동체에서 중요한 대학자치의 개념이 일인 교수로 구성된 당시 교수단의 특권적 우위 속에서 교수권의 강화로 자리잡았다. 1924년에 건설된 경성제국대학과 다른 사학에 대한 식민지 고등교육정책의 차별화가 이후 한국 고등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질곡으로 나타난다. 해방후 자주적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친일-친미세력들의 주도권 쟁취를 위한 음모의 하나가 바로 미국식 고등교육개혁이며 그것은 국대안 사건으로 표출된다. 국대안 사건의 강행 이후 대학 공동체의 구심이 교수단을 중심으로 한 자치에서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관료주의적 통제로 급변한다. 이에 따라 교수-학생 간의 갈등도 증폭된다. 해방후 고전적 대학모형에 대한 향수, 미국식 실용주의적 대학교육모형에 의존한 대학의 양적 성장과 교수요원의 절대부족은 대학에 대한 정부의 간여를 증대시켰고, 이의 이면에서 사학의 무분별한 발전이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정의를 어렵게 한 요인이다. 5·16 쿠데타 이후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훨씬 강화되었고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학의 자율성은 공공성이란 미명하에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유신 이후 한국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직접 간여는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켜 버렸다. 1972년에 시도된 미국식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실험대학안'은 개혁을 위한 일체의 실패투자를 외면한 채 추진된 것으로써 부실한 대학교육을 더욱 부실하게 만드는 반면 대학 재단에 재정적 이점을 갖다준 비교육적 사건이다.

80년 7·30 조치로 가시화된 소위 대학졸업정원제 및 대학의 급팽창은 교수요원양성의 부실화 및 학원민주화운동의 촉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로 인한 고등교육 실업의 문제가 생산직 하위노동력의 절대부족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는 제3세계 교육적 징후가 표면화되었다.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6공에 와서는 재단과 교수 간의 갈등으로

전도시키면서 이루어졌다. 또한 학생운동의 방향이 상당부분 학내문제로 조준되면서 서구에서의 학생운동과 상이한 교수권과 학습권의 괴리의 양태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대학에서 교육주체에 대한 논쟁이 갈등관계 속에서 전개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식민지적, 신식민지적 조건 속에서 발전하면서 우리식의 발전 혹은 제3세계적인 대학발전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가에 대한 자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학사를 개략적으로 훑어볼 때 개방에 대한 위기의식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그럼에도 대부분 대학시장의 위기를 대학교육소비자들의 이탈, 한국 대학의 시장가치 절하 그리고 그에 따른 경쟁력 상실의 대학이 망하는 것 등에 초점이 모아진다. 그러나 대학은 궁극적으로 민족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다. 따라서 망할 수밖에 없는 대학의 생존권적 대응에서 대학시장의 개방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형이상학적 수준에서의 민족공생의 이념을 살리기 위한 대학 자구책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제3세계 대학과 연대해서 공동으로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 4. 세계시장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학문의 주체성은?

학문은 자민족의 특수성에 기초해서 보편적 언어로 서술되어야 하지만 세계경제구조 속에서 상품화된 지식은 보편성의 이름하에 약소국의 특수성을 부정해 버린다. 그것의 결과는 학문이 문화적 침투의 수단이 되고 일부 학자들은 정권의 정통성이 약한 국가에서 자국에 맞지도 않는 제국주의적 지식을 선전하고 판매하는 반민족적 지식인으로 전락한다. 따라서 언제나 민족정신을 지키는 학자는 사회

적 비판인으로 대학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은 역사적으로 지나치게 외세의 지배에 무방비적이었다. 그 결과 시대정신을 일깨우고 비판적 지성인으로서 전문성을 배가시켜야 하는 대학구성원들이 민족학문의 건설을 위해 솔리데리티에 기초한 공동의 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실은 학자의 비판정신이 독선으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선 항상 학문적 상호교류 활동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 편견에 사로잡혀 폐쇄적인 문을 열고 있지 못하다.

우선 학자들간의 대화의 장을 열어 학문적 주제성을 발전시킬 때 이는 이후 통일된 민족공동체의 학문적 대화를 트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간 교수교류 및 학생교류를 통한 학문적 교류를 지금부터라도 시도해야 한다. 국내적 기반 위에서 남북간 학문교류를 전개해야 한다. 국내 대학간에도 문을 열지 못하는 우리가 외세에 떠밀려 개방하게 될 때 받는 충격은 먹느냐 먹히느냐 식일 수밖에 없다. 이때 특히 자칭 일류대는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내적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그동안 독재정권하에서 대학은 지나치게 중앙정부의 통제와 동시에 비호 속에서 양적으로 성장해 오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상실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자주적 발전의 길이 봉쇄되었고 더욱 더 나쁜 것은 모든 대학이 정부가 정한 획일적 잣대에 의해 일류대학에서부터 맨꼴지 대학까지 서열화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에 반대하는 교수들을 제임용에서 탈락시켰던 선례를 보임으로써 대학 자체의 학문적 능력제고를 위한 자정기구의 설치를 무력화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로 자처하는 현 정부가 과거 정부의 비민주적 요소를 근절시키기는커녕 권위주의적 교육행정의 잔재인 평가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물론 대학 중에는 문제가 많은 대학도 있다. 교수 중에도 능력이나 인격상에 문제를 지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처를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대학간 대학평가제나 교수강의평가제를 제도화한다는 점은 학문공동체로서의 대학의 본질과 그 기반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미 대학평가제나 교수강의평가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그 순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무능력 교수는 학생들이 다 평가하고 있다. 평가주의는 대학을 시장가치라는 단일 잣대에 내맡기는 꼴이 될 것이다.

셋째, 대학을 학문적 공동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석사, 박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대학연구소를 활성화해야 한다. 대부분의 우수 대학들은 학과의 수만큼 연구소를 갖고 있다. 교수들은 학문적 지도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주며 미래의 학문 동역자에 대한 생활상의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현재 해외유학을 마치고 교수가 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국가의 교육제도를 지나치게 존경한 나머지 학생들에게 사대주의란 말을 듣기도 한다. 그러나 그 교수는 본국에서 자기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존경하는 외국 대학의 교수들처럼 제자들을 돌보고 있는가? 드러내기 민망한 교수-제자 간의 비리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의 학문적 성과물이라도 내놓고 있는가? 교수와 박사학위 과정의 연구자들이 학문적 도제관계로 발전될 대학연구소들이 활성화 되면 비참한 시간강사들의 자리도 해결될 것이고 이로 인해 향상된 대학의 학문적 성과는 모두를 자극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도 높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문제는 이전 교육기관의 문제와 항상 연계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조기에 민족주체성에 기인한 개방적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세계시장의 개방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특히 대학교육에 투자하는 교육비용보다 초·중등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고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진로지도가 뒤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학력이 비경제적 차별화의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